



2025.10.21(화) 제25-78호

KOTRA 워싱턴 D.C. 무역관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주요 내용

워싱턴 D.C. 포커스

- (관세) 美, 중·대형 트럭 대상 신규 관세 조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
 - 11월 1일부 중·대형 트럭 25%, 버스 10% 신규 관세 부과

경제통상 동향

- (관세) 美, 노동·인권 침해를 이유로 對니카라과 최대 100% 관세 부과 추진 4
- (탄소세) 국제해사기구(IMO), 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 연기 5
- (핵심광물) 美-호주, 희토류·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협정 발표 6

의회법안 동향

- 인공지능(AI) 및 금융 규제 등 총 4건 7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9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10

워싱턴 D.C. 주요일정

10.23(목)	• 10월 3주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Initial jobless claims)
10.24(금)	• 9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ore CPI)
10.27(월)	• 9월 내구재 주문(Durable-goods orders)
10.28(화)	• 10월 소비자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 워싱턴 D.C. 포커스

(관세) 美, 중·대형 트럭 대상 신규 관세 조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1. 개요

□ 행정명령 개요

- 중·대형 트럭 및 버스 신규 관세 발표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상쇄 프로그램 연장
 - 백악관은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 수입품에 25%, 버스에 10%의 국가 안보(무역확장법 제232조) 기반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표(10.17)
 - 아울러, 미 자동차 제조업체의 수입부품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 관세 상쇄 프로그램(offset program)'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상쇄율 3.75% 유지 발표

〈자동차 부품 및 중·대형 트럭 주요 적용 및 상쇄 프로그램 개요〉

구 분	주요 대상	관세율	상쇄율	적용 시기	비 고
중·대형 트럭	Class 3~8 트럭 수입	25%	3.75% (생산기반 상쇄)	2025.11.1. ~ 2030.10.31	USMCA 역내산은 미국산 함량 제외한 비(非)미국산 가치에만 관세 적용
버 스	학교·도시·관광· 장거리용 운행 버스(모터코치)	10%	해당 없음	2025.11.1. 시행	232 조사 대상 외 관련 산업까지 확대 적용
트럭 부품	트럭 조립용 부품 (USMCA 역내산 포함)	최대 25%	3.75% (트럭 제조사 상쇄 가능)	절차 확정 전 유예	향후 비(非)미국산 가치 산정 절차 마련 예정
엔진 부품	트럭 엔진 및 자동차 엔진 제조사	최대 25%	3.75%	2025.11.1. ~ 2030.10.31	신규 상쇄 프로그램, 조립 생산액 기준 산정
철강·알루미늄	차량 생산용 소재 (USMCA 대상)	최대 50%	감면 없음. (25%까지 관세 인하 가능)	즉 시	캐나다·멕시코에서 제련된 경우 감면 적용
자동차 부품	승용차용 수입 부품	최대 25%	3.75%	2025.4.2. ~ 2030.4.30	기존 프로그램 3년 연장 및 상쇄율 유지

[자료: 백악관 보도자료 및 연방 관보, 현지 로펌 자료 종합]

2. 상세

□ 신규 관세 및 상쇄 프로그램 주요 사항

- 이번 신규 조치는 상용차(트럭·버스)와 그 부품, 엔진 등을 대상으로 기존 2024년 시행된 승용차 25%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
 - 트럭·엔진 제조업체에는 자동차 부품과 동일한 상쇄 프로그램(3.75%) 도입
 -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부품에 대해 관세 면제 또는 차등적용 가능하며, 수입업자가 미국산 함량을 입증할 서류 제출 요구
 - 현행 프로그램은 최대 25%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미국 내 완성차 및 부품 제조업체가 일정 조건 충족 시, 해당 차량 제조원가(MSRP)의 최대 3.75%를 세액 환급(Offset Credit) 받도록 지원함.
- * 상쇄 프로그램은 기존 2027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030년까지 3년 연장
- 상쇄 프로그램 적용 범위는 미 상무부(Commer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비(非)미국산 부품 함량 산정체계를 구축한 뒤 구체화될 예정

□ 현지 반응 및 전망

- 업계는 트럭 및 엔진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단기적 비용 상승과 행정 부담 증가를 우려하나,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 비중 확대 효과를 기대
 - 비(非)미국산 부품 함량 평가 및 무관세 대상 판단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일부 제조업체의 운영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EU,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은 기존 승용차 관세에 대해 협정을 통해 15% 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번 신규 트럭 관세는 별도의 범주 및 시기에 따라 도입되어 현재는 25%가 기본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로이터)
 - 다만, 특정 교역국과 별도 협의에 따른 낮은 관세율 적용이 합의될 경우, 별도 협상을 통한 관세율 변경 가능성 존재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백악관(10.17), 폴리티코(10.17), 인사이트(10.17), 로이터(10.7)



(관세) 美, 노동·인권 침해를 이유로 對니카라과 최대 100% 관세 부과 추진

- (개요) USTR, 對니카라과 301조 조사 결과 발표 및 고율관세 제안(10.20)

- 미 무역대표부(USTR)는 24.12월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니카라과의 노동·인권·법치 훼손 행위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조치로 규정
- 이에 따라, 對니카라과 수입품에 최대 100% 관세 부과,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 특혜 전면 또는 부분 중단, 국무부 후속 제재 검토 등을 대통령에게 권고

* CAFTA-DR은 2006년 발효된 미국과 중미 5개국 및 도미니카공화국 간 자유무역협정

- (상세) 對니카라과 인권·노동·법치 훼손에 따른 미 기업 피해 및 통상환경 악화

- (노동권 침해) 니카라과의 강제·아동노동 및 노조활동 억압으로 생산비가 인위적으로 왜곡되어, 미 기업의 공정경쟁 여건 저해 및 시장점유율 축소 등 실질적 피해 발생
- (재산권 침해) 니카라과 정부의 종교단체 및 민간자산 몰수 조치로 미 시민과 기업의 재산이 침해되고, 현지 투자·사업활동이 중단되는 등 실질적 경영 피해 발생
- (법치 훼손) 행정부 권한 집중과 세금·통관의 자의적 집행으로 미 기업의 투자회수 지연 및 계약이행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對니카라과 통상환경의 안정성 저하

- (반응) 인권 중심 제재에 대한 정당성 공감과 산업계 공급망 우려 병존

- 미 의회와 인권단체는 니카라과의 인권·노동권 침해에 대한 제재를 정당하고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하며, CAFTA-DR 내 민주주의 가치 수호의 계기로 언급
- 섬유·의류 및 농식품 업계는 특혜 전면 중단 시 생산·고용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역내 공급망 혼란에 대한 단계적 이행 및 완충 조치 필요성 제기
- 통상 전문가들은 제재로 인한 시장 공백을 중국 등 비우호국이 대체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역내 공급망 재편 및 대체 시장 확보 전략 병행의 필요성 제언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USTR(10.20), 블룸버그(10.20)

(탄소세) 국제해사기구(IMO), 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 연기

- (개요) 국제해사기구, ‘넷제로(Net-Zero) 프레임워크’ 채택을 위한 투표 진행
 - 국제해사기구, 해운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넷제로(Net-Zero) 프레임워크*’ 및 해운 탄소세(Carbon Tax)** 최종 규칙 채택을 위한 회원국 투표 진행(10.17, 런던)
 - * '50년까지 해운업을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배출 한도와 탄소세 가격 메커니즘 포함
 - ** 5,000톤 이상의 원양 선박 대상 탄소 배출량 기준, 톤당 100달러에서 380달러의 벌금 부과
- (상세) 미국 포함 주요 해운국의 반대로 넷제로 프레임워크 탄소세 도입 1년 연기
 - 국제해사기구는 넷제로(Net-Zero) 프레임워크 및 해운 탄소세 도입을 1년 연기 결정
 - 사우디아라비아가 넷제로 도입 연기를 제안, 미국 포함 러시아, 중국, 싱가포르, 라이베리아 등 주요 해운국이 이를 지지하고 일부 EU 회원국은 기권*
 - * 57개국 찬성으로 연기안 통과, 49개국 반대, 21개국 기권, 8개국 불참
 - 탄소세 반대국들은 ‘비현실적인 기술 의존’과 ‘과도한 비용 인상’을 근거로 제시, EU, 브라질 등 찬성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해운 부문 제외 불가’를 주장
 - 트럼프 행정부는 투표에 앞서 탄소세를 강하게 반대하며, 해운 탄소세 지지국에 항만세, 비자 제한,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경고하며 압박 가중
- (반응) 기후 목표 후퇴에 대한 우려와 미국 주도의 자국 산업 보호 강조 혼재
 - 유럽연합 포함 다수의 국가, 기후 단체 및 해운업계는 탄소세 도입을 통한 해운 탄소중립 추진의 필요성 및 규제의 명확성을 강조하며 연기 결정에 유감 표명
 - 미 하원 번 뷰캐넌 의원은 이번 결정을 ‘중대한 승리’라고 언급하고, 불공정한 글로벌 탄소세 도입 영구 저지 및 미국의 주권, 경쟁력, 해양력 보호를 위한 노력 지속 강조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인사이트(10.17), 폴리티코(10.17)

(핵심광물) 美-호주, 희토류·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협정 발표

- (개요) 美-호주, 희토류·핵심광물에 대한 투자 협력 협정 체결(10.20)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 의존도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호주 정부와 핵심광물 채굴 및 정제 부문에 대한 공동 투자 합의 발표
 - 동 협정은 전기차·반도체·방산 등 첨단산업용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불공정 무역관행 차단을 위한 가격하한제 등 무역기준 도입 포함
- (상세) 양국, 희토류·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및 공급망 다변화 추진
 - 백악관은 6개월 내 양국이 3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고, 미 수출입은행이 22억 달러를 추가 지원해 총 50억 달러 이상 민간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
 - 호주는 미국 지정 55종 핵심광물 중 43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7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전략 비축 기금을 조성해 광산 지분 매각 및 투자 유치 추진
- (반응) 전문가들은 공급망 안정화 기대감 표명, 중국 정부는 부정적 입장 표명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앞으로 1년 내 충분한 핵심광물과 희토류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자원안보 강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대한 기대감 표명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주요 자원 보유국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국가 간 배타적 협력은 정상적인 무역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
 - 미국 수출입은행은 이번 협력이 △미국 내 첨단 제조업 기반 강화 △중국의 자원 공급 지배력 대응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기범
▪ 자료원	폴리티코(10.20), NYT(10.21), 로이터(10.21)

▣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운송 (10.16)	S.3013 (상) (10.16)	Tom Cotton (공)	<p>〈상업용 운전면허 법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ure Commercial Driver Licensing Act ▪ 상업용 운전면허(Commercial Driver's License, CDL) 신규·갱신 시험을 모두 영어로 실시하도록 의무화 ▪ 연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주에 대해 교통부 장관이 비거주자 CDL 발급 권한을 정지·취소할 권한 부여
	H.R.5767 (하) (10.16)	Andy Barr (공)	
인공 지능 (10.17)	H.R.5764 (하) (10.17)	Mark Alford (공)	<p>〈AI 활용 중소기업 지원 강화 법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for Mainstreet Act ▪ 중소기업청(SBA) 산하 중소기업개발센터(SBDC)가 중소 기업의 AI 기술 평가·통합을 지원하도록 명시
세계 해운 배출세 (10.17)	H.Res.812 (결의안) (10.17)	Andy Biggs (공)	<p>〈국제해사기구의 글로벌 탄소세 추진 반대 결의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demning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for proposing a global tax on shipping emissions, threatening United States sovereignty, trade, and economic interests ▪ 국제연합(UN)과 국제해사기구(IMO)가 글로벌 탄소 감축 정책인 넷제로(Net-Zero)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제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탄소세 (Carbon Tax) 시행에 반대하는 결의안 ▪ 국제 탄소세를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저해하는 부당한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국제해사기구 미국 대표에게 탄소세 도입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촉구
금융 규제 (10.20)	S.3017 (상) (10.20)	John Kennedy (공)	<p>〈의심 금융 거래 보고 제도 간소화 및 자금세탁방지 개선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Streamlining Transaction Reporting and Ensuring Anti-Money Laundering Improvements for a New Era (STREAMLINE) Act ▪ 은행비밀법(BSA)은 금융기관이 자금 세탁 및 사기를 포함한 금융 범죄를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해 정부 기관을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법률로, 금융 기관은 이 법률에 따라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현금 거래보고서 제출 및 의심스러운 금융 활동 보고 의무 보유 ▪ 동 가정인에 따르면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한도는 현행 1만 달러 이상에서 3만 달러로, 의심거래보고 (suspicious activity report, SAR) 한도는 현행 2천 달러 또는 5천 달러에서 3천 달러 또는 1만 달러로 상향 조정

* 미국 동부 시간 10월 21일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p>Gold Suffers Biggest Drop in More Than a Decade (폭락하는 금값...10여 년만에 최대 낙폭 기록)</p> <p>최근 금값은 폭등세를 보였으나, 금일 금값은 5.7% 하락하며 트로이온스당 4,109.10달러에 거래돼. 금값은 2013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으며 은값과 광산업 주가도 하락세를 보여</p>
The Washington Post	<p>White House begins demolishing East Wing facade to build Trump's ballroom (백악관, '트럼프 볼룸' 착공...이스트윙 철거 개시)</p> <p>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대형연회장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트윙 철거를 시작해. 한편 법무부는 직원들에게 허가 없이 공사 사진을 찍거나 인터넷상에 공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p>
The New York Times	<p>Trump Said to Demand Justice Dept. Pay Him \$230 Million for Past Cases (트럼프 “법무부는 2억 3천만 달러 배상해야 해”)</p> <p>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연방 수사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법무부에 2억 3천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등이 이제는 배상금 지불을 승인해야 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어 윤리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 제기</p>
CNN	<p>Trump's hopes for quick second summit with Putin have stalled out (미·러 2차 정상회담...근시일 내 개최 가능성 없어)</p> <p>트럼프 대통령은 근시일 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자 했으나, 루비오 국무장관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통화 이후 정상회담 개최 계획이 보류된 것으로 밝혀져</p>
USA Today	<p>America's most expensive ZIP code isn't in California or New York (미국에서 가장 비싼 거주 지역은?)</p> <p>미국에서 가장 비싼 주거지는 마이애미 비치로, 지난해 최고 주택 판매가는 2,370만 달러였던 것으로 밝혀져. 그 외 캘리포니아주 애서튼, 뉴욕주 사가포낙,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비치 등이 순위에 올라</p>

* 미국 동부 시간 10월 21일 16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5-38	美 무역전쟁이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5.10월
US25-37	美 특허의약품 관세 정책 추진 및 제약사별 대응 동향	2025.10월
US25-36	미국 정부의 관세 위반 단속 강화 추세와 향후 전망	2025.09월
US25-35	미국 연준 금리 인하 발표 및 하반기 경제 전망 변화	2025.09월
US25-34	'25년 2분기 美 청정에너지 투자 동향과 정책 환경 영향	2025.09월
US25-33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9월
US25-32	트럼프 관세로 인한 미국 무역 구조 변화 ('25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2025.08월
US25-31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자립 정책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8월
US25-30	미 풀리실리콘 232조 조사 관련 의견수렴 주요 내용	2025.08월
US25-29	미 미소기준(De Minimis) 면세 중단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08월
US25-28	미 정부 『AI 행동계획』 행정명령 발효 - 주요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8월
US25-27	백악관 에너지산업 정책보고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7월
US25-26	CSIS 중국의 갈륨 수출 통제 및 글로벌 공급망 영향 분석	2025.07월
US25-25	미 최초 암호화폐 법안(Genius Ac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07월
US25-24	트럼프 행정부, 감세법 발효로 IRA 기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개편 추진	2025.07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사-23 (2025.8.26.)		
코인사-22 (2025.5.13.)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shim.nature@kotra.or.kr	+1) 202-857-7919